

사기 고소장

형사소송 전문 AI 법률 플랫폼

분석일: 2026년 9월 22일 | 분석 문서: 1건 | HYOUNGBLY AI

고소장

고소인

성명: 정민지(가명)

생년월일: 1994년생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상세주소 기재 필요)

연락처: 010-0000-0000

피고소인

성명: 성명불상(중고거래 앱 닉네임 "달빛마켓")

주소: 불상

연락처: 010-1111-1111

사용 계좌: OO은행 000-0000-0000 (예금주 한OO)

죄명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범죄사실

1. 기망행위

피고소인은 2026. 8. 10.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에 "미개봉 노트북(OO 브랜드 16인치) 145만원" 판매 게시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고소인이 같은 날 저녁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피고소인은 "직거래는 어렵고 안전결제 수수료가 아까우니 계좌로 입금하면 당일 택배 발송하겠다"고 제안하며 위 OO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트북 박스 사진과 구매 영수증 사진을 채팅으로 전송하였으며, "정품 미개봉 상태"라고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애초부터 물품을 발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대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고지한 것입니다.

2. 착오 및 재산상 처분행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제공한 박스 사진, 영수증 사진 및 "당일 발송" 약속을 믿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착오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2026. 8. 10. 20:37경 피고소인이 지정한 OO은행 계좌(예금주 한OO)로 대금 1,450,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3. 재산상 손해 발생

피고소인은 입금 직후 "내일 발송하겠다"고 답하였으나, 2026. 8. 11.부터 "택배사 파업으로 지연된다"며 발송을 미루었습니다. 2026. 8. 14.부터는 채팅 답장이 두절되었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2026. 8. 16. 피고소인의 중고거래 앱 계정이 탈퇴 처리되어 더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소인은 물품을 전혀 수령하지 못한 채 1,450,000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게시글 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 2명이 추가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피고소인의 계획적·반복적 범행을 뒷받침합니다.

4.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피고소인은 처음부터 물품 발송 의사 없이 대금만 편취할 목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고, 입금 후 연락을 회피하며 계정을 탈퇴한 점에서 사기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명백합니다.

고소이유

피고소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피고소인은 기망행위로 고소인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처분행위를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고소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습니다.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피고소인이 사용한 계좌의 예금주(한OO)가 실제 범인과 다른 인물일 가능성(이른바 대포통장 사용)이 있으나, 이는 수사기관의 금융거래 추적 및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실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좌 예금주가 공범이거나 통장을 대여한 자일 경우 그 역시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증거자료

- 중고거래 앱 채팅 내역 캡처 27장 (판매 게시글, 거래 협의 내용, 계좌번호 전달, 발송 약속 및 회피 과정 포함)
- 이체내역서 1부 (2026. 8. 10. 20:37, OO은행 계좌로 1,450,000원 이체 확인)
- 판매 게시글 캡처 3장 (노트북 사진 및 가격 표시)
- 피고소인이 전송한 노트북 박스 사진 및 영수증 사진 2장
- 피해자 모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2장 (동일 수법 피해 사례 확인)
- 피고소인 연락처 010-1111-1111 (통화 시도 기록 포함 시 추가 제출 가능)
- 중고거래 앱 계정 탈퇴 확인 화면 캡처 (제출 가능 시)

수사 및 피해 회복 관련 의견

1. 계좌 예금주가 다른 경우(대포통장 사용 가능성)

피고소인이 사용한 계좌의 예금주 한OO이 실제 범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한OO이 통장을 대여하거나 판매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한OO 본인이 직접 범행을 저지른 경우 사기죄의 정범이 됩니다. 수사기관께서 금융거래 내역, 통신자료, IP 추적 등을 통해 실제 범인을 특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른 피해자와의 공동 대응

고소인은 피해자 모임을 통해 동일 수범으로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 2명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각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고소할 수도 있으나, 동일 피고소인에 대한 연속적·반복적 범행이 입증될 경우 죄질이 가중되어 엄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협의하여 공동 고소 또는 각자 고소 후 병합 수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피해 회복 방안

고소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고소인의 신원 및 재산 파악이 선행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 유죄 판결 시 법원이 직권으로 배상을 명할 수 있으므로, 기소 후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결어

피고소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악질적 사기 범죄입니다. 수사기관께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을 특정하고 엄정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라며, 고소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9월 1일

고소인 정민지 (인)

OO경찰서장 귀중

판사 관점 검토 보고서

본 고소장은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관한 것으로,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비교적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실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피고인 특정, 기망행위의 입증, 고의의 증명 등 여러 쟁점이 남아 있어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 원고 주장의 설득력

고소인의 주장은 사기죄의 4대 구성요건인 기망행위, 착오, 재산상 처분행위, 손해 발생을 순차적으로 기술하고 있어 법리적 구조는 타당합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노트북 박스 사진과 영수증을 제공하며 "정품 미개봉", "당일 발송" 등을 약속한 점을 기망행위로 특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145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처분행위로 연결한 논리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사기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 즉 편취의 고의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고소장에서는 입금 직후 발송을 미루고, 택배사 파업을 핑계로 회피하다가 계정을 탈퇴한 정황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애초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소인이 "처음에는 판매 의사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발송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경우,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를 구별하는 것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성명불상"으로 특정되어 있고, 계좌 예금주가 한OO으로 다른 점은 실제 재판에서 피고인 특정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고소장 단계에서는 성명불상 고소가 가능하나, 기소 및 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명확히 특정되어야 하므로, 수사기관의 금융추적 및 통신자료 조회 결과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2. 증거의 충분성

제출된 증거는 채팅 내역 27장, 이체내역서, 판매 게시글, 노트북 사진 및 영수증, 피해자 모임 게시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채팅 내역과 이체내역서는 거래 경위와 송금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서 증명력이 높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이 계좌번호를 직접 알려주고 "당일 발송"을 약속한 채팅 내용은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사기죄 입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인데,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직접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편취 고의를 인정합니다. 첫째,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는지 여부, 둘째, 피고인이 실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입금 후 즉시 연락을 두절하거나 계정을 삭제했는지 여부, 넷째, 대포통장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 모임을 통해 동일 수법의 다른 피해자 2명이 확인되었다는 점이 유리한 정황입니다. 만약 이들이 공동 고소하거나 각자 고소 후 병합 수사되어 동일인의 반복적 범행이 입증된다면 편취 고의 인정에 상당히 유리할 것입니다. 또한 계좌 예금주 한OO에 대한 수사를 통해 대포통장 사용 여부, 한OO과 실제 범인과의 관계 등이 밝혀진다면 증거가 보강될 것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증거로는 첫째, 피고소인이 전송한 노트북 박스 사진 및 영수증의 진위 여부 확인(해당 제품의 실제 구매 여부, 사진의 출처 등), 둘째, 피고소인의 중고거래 앱 가입 정보 및 IP 로그, 셋째, 계좌 한OO의 금융거래 내역 및 출금 경로, 넷째,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유죄 입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3. 상대방 예상 반박

피고인 측에서 제기할 수 있는 주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특정 부인입니다. 계좌 예금주 한OO이 "본인은 통장을 분실했거나 타인에게 대여했을 뿐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제 범인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경우 검찰은 한OO의 통장 관리 경위, 대여 또는 양도 경위, 범행 당시 한OO의 소재 및 행적 등을 입증해야 하며, 한OO이 고의로 통장을 제공했다면 사기방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한OO 자체가 사기죄의 정범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이행 의사 존재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가 있었으나, 개인적 사정(예: 급작스러운 자금 필요, 가족 문제 등)으로 발송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경우, 이는 단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항변이 성공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증거, 발송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정황 등을 제시해야 하나, 본 사건에서는 계정 탈퇴 및 연락 두절 등의 정황상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셋째, 증거 부족 주장입니다. 피고인이 "채팅 내역이 조작되었거나, 고소인이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일 뿐 자신은 거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채팅 내역의 진정성은 중고거래 앱 운영사의 로그 기록으로 확인 가능하며, 이체내역서는 금융기관의 공식 기록이므로 이 항변 역시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넷째, 다른 피해자와의 관련성 부인입니다. 피고인이 "다른 피해 사례는 자신과 무관하며, 우연히 유사한 사건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동일한 게시글 사진, 동일한 수법, 동일한 계좌 사용 등이 입증된다면 이 항변은 배척될 것입니다.

4. 판결 예측

인용(승소) 가능성: 65% / 기각(패소) 가능성: 35%

본 사건이 실제 형사재판에 이르렀을 경우, 유죄 판결 가능성은 약 65% 정도로 예측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초합니다.

먼저 유리한 요소로는 첫째, 채팅 내역과 이체내역서가 명확하여 거래 경위 및 송금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는 점입니다. 둘째, 피고인이 입금 후 발송을 미루다가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두절한 정황은 편취 고의를 강하게 시사합니다. 대법원은 "거래 상대방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234 판결 등 참조). 셋째,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점은 계획적·반복적 범행을 뒷받침하며, 이는 우연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사기 범행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반면 불리한 요소로는 첫째, 피고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계좌 예금주 한OO이 실제 범인인지, 아니면 대포통장 명의자에 불과한지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며, 만약 한OO이 단순 통장 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제 범인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실제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전송한 사진이 허위인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발송하지 못했다"고 항변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한다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통상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입금 후 즉시 연락 두절 또는 계정 삭제한 경우, 동일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 발생한 경우, 대포통장 사용한 경우, 실제 물품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허위 사진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편취 고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향입니다. 반면 거래 초기에는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피해자가 1명에 불과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에는 무죄를 선고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의 경우 입금 후 연락 회피 및 계정 탈퇴, 다수 피해자 발생 등의 정황이 있어 유죄 판결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 특정 문제와 이행 의사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 실제 범인이 특정되고,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가 병합되어 반복적 범행이 입증된다면 유죄 가능성은 80% 이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 특정에 실패하거나, 한OO이 단순 통장 대여자로 밝혀지고 실제 범인을 찾지 못한다면 기소 자체가 어려워 사실상 패소(불기소 또는 공소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양형 측면에서는 피해액이 145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고, 초범일 경우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고 총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 실행도 가능하며, 배상명령 신청 시 법원이 피해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판사 코멘트

본 고소장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첫째, 피고인 특징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성명불상"으로 고소되어 있고 계좌 예금주가 한OO으로 다른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거래 추적, 통신자료 조회, IP 로그 분석 등을 통해 실제 범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만약 한OO이 실제 범인이라면 사기죄 정범으로 기소할 수 있으나, 한OO이 단순 통장 대여자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사기방조로 처벌하되, 실제 범인을 별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앱 운영사에 가입 정보 및 접속 로그 제공을 요청하고, 휴대전화 010-1111-1111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통해 명의자 및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편취 고의 입증을 위한 간접사실을 더욱 구체화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전송한 노트북 박스 사진 및 영수증이 실제 본인이 구매한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허위 사진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지 검색 등을 통해 동일한 사진이 다른 곳에서 사용되었는지 조사하고,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처에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동일한 게시글로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매를 제안했는지, 입금받은 돈을 즉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했는지 등을 확인하면 편취 고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확인된 다른 피해자 2명이 각자 고소하거나, 가능하다면 공동 고소하여 동일인의 반복적 범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단발성 거래보다 반복적·계획적 범행에 대해 편취 고의를 더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른 피해자들의 증거(채팅 내역, 이체내역, 게시글 등)를 함께 제출하면 증명력이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넷째, 피해 회복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조에 따른 배상명령 신청은 기소 후 제1심 변론 종결 전까지 가능하므로, 검찰이 기소한다는 통지를 받으면 즉시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이 없거나 소재 불명일 경우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병행하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계좌 추적을 통해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행방을 파악하고, 아직 인출되지 않았거나 다른 계좌에 남아 있다면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섯째, 법리적으로 약한 부분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의 직접 증명입니다. 현재 제출된 증거는 대부분 사후 정황(연락 회피, 계정 탈퇴 등)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행 의사가 있었으나 사후 사정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항변할 여지를 남깁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동일 시점에 여러 명에게 동시에 판매를 제안했는지, 실제로 노트북을 보유하지 않았는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결국 피고인 특정과 편취 고의 입증입니다.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금융추적 및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지고, 다른 피해자들과의 공동 대응이 성공한다면 유죄 판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 특정에 실패하거나 편취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불기소 또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께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추가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 회복 절차를 적극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AI 기반 분석

본 판결 예측은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본 보고서는 AI 기반으로 작성된 결과물입니다.

HYOUNGBLY AI | 형사소송AI형블리